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엔저 대응, 농식품 수출 추가 지원방안
농자재산업 종합대책

거시경제 동향

2013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산물 유통실태와 개선 방안 여론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4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엔저 대응, 농식품 수출 추가 지원방안

※ 본 자료는 201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엔저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배경

- [3월 대책 발표] **급격한 엔화 환율 하락**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엔저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안전망 사업 추진**

- 환변동위험 축소를 위한 신규 환변동보험(옵션형 환변동보험) 개설
- 일정금액(5만 불)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 신규 도입

※ 현재 80여개 농식품 수출업체 신청, 5월 중순경 aT에서 일괄 가입, 5월 이후에도 추가신청을 받아 가입 지속 예정

- [엔저의 장기화] **4월 이후에도 급격한 엔화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엔저의 장기화가 예측됨에 따라 추가적 대응방안 필요

※ ₩/¥100: ('12년 말1,235 → ('13.1월 말1,196 → ('13.2월 말1,172 → ('13.3월 말1,181 → ('13.4월 말 1,130

※ 대일 농식품 수출액(백만 불): ('12.1~4월) 448.5 → ('13.1~4월) 408.6 (△8.9%)

□ 추가지원 방안

- [신규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빠르면 5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와 협의 중

- (**기존 지원내용**) 환율 하락 시 일정 부분만 보장하는 대신, 환율 상승 시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보장범위는 외화 당 40원·보장금액은 최대 50만 불로 설계

- (**개선 사항**)

① **보장범위 확대**(50만 불 → 100만 불)

② **선택옵션 다양화**(외화 당 최대 40원 범위보장·4개 옵션 → 외화 당 최대 80원 범위보장·6개 옵션)

-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엔저(低) 피해가 큰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 **(목적)** 신선농산물의 대일(對日) 수출 능력 강화와 수출업체의 경영 채산성 악화 방지
 - **(대상)** 수출전략품목 중 '12년 대일수출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13.1~3월 기간 대일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 품목(파프리카, 장미, 백합, 국화, 김치, 막걸리)
 - **(지원내용)** '13.5.1~7.31 기간 동안 대일 수출 선적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표준물류비의 3% 추가 지원(기존 8~10% 지원)
-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엔저 피해를 입은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 운영자금 사업예산 **300억 원 추가 편성**

주요 농정 이슈_2

농자재산업 종합대책

※ 본 자료는 2013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 발표 - 농자재 물류거점(유통센터 3개소) 신설 및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목적]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 최근 유류, 비료·농약 원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비 압박
 - ※ 농자재비(천 원): ('05) 7,637 → ('09) 8,960 → ('10) 9,627 → ('11) 9,678 ('05년 대비 27% 증가)

- [중점방안] 농기계 이용 효율화, 비료·농약 에너지 사용량 절감, 농자재 유통 구조 개선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비용 절감방안을 중점적으로 수립
 - 아울러 농자재 R&D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수입대체 확대 등 농업의 후방연관산업인 농자재산업 강화방안도 포함

□ 세부 방안

1) 농자재 이용 효율화 대책

-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시·군의 **발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6년까지 **400개소**,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은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
 - (들녘별 경영체 확대) '17년까지 500개소로 확대, 들녘별로 순차적 일괄 농작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 (지역 간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원거리 지역 간 공동이용 협약 체결, 근거리(인접 시·군) 지역 간 농기계 공동이용 풀(Pool)시스템 도입
 -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 도입) 고령·장애인·영세농 등을 위해 '14년 시범 도입 후 확대

- **[비료·농약·에너지 사용량 절감]**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의 상태에 따른 **정밀처방(농약사용종합시스템)으로 적정농약 사용 지속 유도**

2)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대책

- **[유통구조 개선]** '16년까지 3개 권역(중부·호남·영남)에 '농자재유통센터' 설립, 시·군단위에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농자재 전문스토어(자재센터)' 설치·운영
 - **(신 유통망 구축)** 농자재유통센터-농자재전문스토어를 연결하여 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 단순화 및 물류비용 절감하여 농자재 가격인하 유도
 - **(농작물 생육진단부터 처방 구입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농자재 전문스토어(자재센터)에 농작물 생육 및 농약·비료·농자재 관련 전문 컨설턴트 배치
- **[공정거래 확립]** 농자재 업체의 담합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공정위 주관), 품질기준 강화하여 불량자재의 유통 방지

3) 농자재 산업지원 대책

- **[R&D 지원]** 우리나라 농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효율·친환경·수출전략형 농자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자재 관련 R&D를 '1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
 - ※ 농자재 관련 R&D 지원: ('12) 636억 원 → ('17) 1,000억 원
- **[해외진출 지원]** 충남 천안에 농기계 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농기계의 수출 촉진
 - **(농자재 수출전략협의회 구성·운영)** 이를 통한 농자재 산업의 해외진출 측면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개발협력사업)와의 연계를 통한 동반진출 활성화
- **[수입대체 확대]**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약, 비료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13~'17년까지 총 500억 원 투자하여 신물질농약, 친환경비료 등의 개발 지원
 - ※ 원자재 수입의존도: 화학비료 100%, 농약 88%

<농자재산업 종합대책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개선 전('12년)	개선 후('17년)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소	250개소	('16) 400개소
	농협 농기계은행	692개소	800개소
	들녘별 경영체	163개소	500개소
	논농작업대행	벼 재배면적의 13%(195천ha)	30%이상
	맞춤형농작업 대행팀 확대	40개소	200개소
	지역 간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	시·군 간, 시·도 간 농기계 공동이용 및 일괄 농작업 추진
	정보제공 활성화	-	임대사업 콜센터 설치·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비료·농약 에너지 사용 절감	유기질비료 지원	1,350억 원	1,450억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830ha	2,375ha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2,780ha	10,050ha
농자재 유통 구조 선진화	농자재 유통구조	지역농협, 시판상, 대리점 등 복잡한 유통경로 경유	자재유통센터-농자재전문 스토어를 통해 유통구조 단순화, 물류비 절감
	담합행위 제제	-	신고포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불량자재 유통방지	-	비료 품질기준 강화 한국형 온실 표준규격 마련
강한 농자재 산업 육성	R&D 지원확대	636억 원	1,000억 원
	해외진출 지원	-	농기계 종합유통지원센터 건립 농자재수출전략협의회 운영
	수입대체 확대	-	신물질농약, 친환경비료 개발 지원('13~'17년 500억 원)

거시경제 동향

2013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3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13.4월 수출물가] 전월대비 0.6% 상승

※ 전년 동월대비 5.7%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9% 상승(전년 동월대비 7.2%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냉동어류 1.2	
	하락	신선어패류 -0.3, 냉동참치 -0.4	냉동참치 -29.7, 냉동어류 -9.8, 신선어패류 -5.9

- (공산품) 반도체·전자표시장치, 일반기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상승(전년 동월대비 5.7%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월	2월	3월	4월 ^{p2)}	1월	2월	3월	4월 ^{p2)}
총 지 수 ¹⁾	1000.0	-0.1	2.4	0.3	0.6	-8.1	-5.6	-5.9	-5.7
		<1.1>	<0.6>	<-0.9>	<-1.1>	<-1.0>	<-2.0>	<-3.4>	<-4.0>
농 립 수 산 품	4.3	-1.2	-1.6	2.4	0.9	-17.7	-16.1	-9.5	-7.2
공 산 품	995.7	-0.1	2.4	0.3	0.6	-8.1	-5.5	-5.9	-5.7
섬유 가죽제품	41.9	-1.0	1.9	1.3	1.6	-9.4	-5.9	-2.9	-2.1
석탄 석유제품	123.9	1.1	5.9	-4.5	-3.2	-10.2	-6.3	-13.0	-14.8
화학제품	173.8	0.1	2.3	-0.8	-0.1	-5.6	-4.8	-6.7	-7.1
제1차금속제품	95.7	-1.1	1.9	0.5	-1.2	-11.0	-9.1	-8.8	-10.1
일반기계제품	90.8	-1.2	1.9	1.2	1.7	-6.0	-2.7	-1.5	-0.8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125.8	2.2	1.3	4.3	4.8	-6.3	-4.2	-0.1	3.2
통신 영상 음향기기	59.6	-1.3	1.8	-0.7	-2.0	-15.6	-13.0	-13.6	-14.5
수송장비제품	111.3	0.9	2.1	0.9	1.6	-3.5	-0.2	0.2	0.0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수입물가지수

○ [13.4월 수입물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

※ 전년 동월대비 9.7% ↓

- (원자재) 천연고무,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유연탄 등 광산품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12.1%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2% 하락(전년 동월대비 5.7% ↓)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과일 3.5, 밀 0.2	쌀 0.5
	하락	천연고무 -13.0, 옥수수 -2.5, 원면 -2.5, 콩 -0.9, 커피 -0.8	천연고무 -36.5, 옥수수 -8.9, 원면 -4.1, 커피 -4.5, 돼지고기 -8.6, 과일 -3.4

- (중간재) 석탄·석유제품, 비철금속피막1차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전년 동월대비 9.3% ↓)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월	2월	3월	4월 ^{p2)}	1월	2월	3월	4월 ^{p2)}
총 지 수 ¹⁾	1000.0	-0.8	2.7	-0.8	0.1	-10.6	-8.6	-10.8	-9.7
		<0.6>	<1.0>	<-1.9>	<-1.4>	<-3.3>	<-4.6>	<-8.0>	<-7.5>
원 자 재	346.4	0.1	4.1	-2.0	0.2	-12.1	-9.9	-14.3	-12.1
농림수산물	21.6	-0.7	2.3	1.0	-1.2	-5.6	-2.9	-3.4	-5.7
광 산 품	310.3	0.1	4.1	-2.1	0.3	-12.4	-10.4	-15.2	-12.6
중 간 재	467.1	-1.2	2.4	-0.5	-0.4	-10.4	-8.3	-9.4	-9.3
석탄 석유제품	78.2	0.3	4.5	-3.5	-4.8	-8.0	-8.5	-16.4	-16.5
화학제품	98.1	-1.6	2.3	-0.7	0.5	-7.6	-5.5	-6.6	-7.8
철강1차제품	36.4	-1.1	2.0	0.9	0.9	-17.6	-14.2	-13.7	-12.1
비철금속피 1차제품	40.8	-0.4	2.4	-1.9	-2.8	-7.4	-7.0	-8.1	-9.1
일반기계제품	21.8	-2.9	-0.1	0.1	0.5	-14.7	-13.4	-11.5	-12.3
전기 전자기기	108.2	-1.9	1.9	0.8	1.5	-11.6	-7.9	-6.4	-5.3
자 본 재	94.7	-2.0	1.0	0.4	1.0	-9.5	-6.8	-6.4	-6.2
소 비 재	91.8	-1.1	1.2	0.9	1.3	-4.8	-3.2	-4.1	-2.7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농산물 유통실태와 개선 방안 여론

○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시스템 확충

- 고령인구, 1인 가구, 맞벌이 증가 등으로 농산물 소비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스마트폰 보편화 등에 따라 농산물도 편리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 택배시스템의 발달, 사이버 일상화, 건강 식생활 추구, 편리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량다품목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해 직거래의 편리성, 간편성, 결제수단 등의 장점을 강조하여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알려져 함.<경기 안성, 임충빈>
-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농업인들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함.<전남 순천, 김종근>
-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매월 2회 도심지에서 '직거래 새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성시 농업인직거래시장운영협의회 자율적 운영, 참여 농가 회원제가 시행되고 있음. 생산자가 직판하고 원산지표시제, 생산자 리콜제를 철저히 이행함. 서울의 집단 아파트 단지와 농촌의 일정범위 지역과 연결시켜 운반비 감소 및 소비인구 집단화를 통해 가격 절감을 이루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경기 안성, 임충빈>

○ 농산물 전문 택배업체 설립으로 직거래 한계점 극복

- 신선과일이나 채소류 등 수송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농산물은 변질·파손으로 반품이 발생하고 오히려 불신감이 증가할 수 있음. 직거래의 한계를 감안하여 적정온도와 취급에 주의하는 농산물 전문 택배업체를 설립한다면 직거래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경북 상주, 김인남>

○ 파머스마켓 상설화 추진

- 대도시 공원에 주일장터를 개장해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도시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그러나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는 생산농가는 품목이 비슷하고 판매되는 물량도 적다보니 이틀 동안 행사참여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소득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음. 행사주관 관리청과 협의하여 상설마켓으로 운영하면 자치 시·군에선 상품선정, 상품선별, 상품 물량을 조절해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가 될 것임.<강원 영월, 유영조>

○ 새벽시장 활성화는 생산자 인식 변화에서부터 비롯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많은 유통단계를 없애고자 직거래가 이루어짐. 원주의 경우 전국 최초 새벽시장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해 롤 모델로 삼고 있음. 그러나 생산자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새벽시장이 매년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 같음. 1등급의 생산품은 도매시장으로 출하, 2등급 생산품에 유통마진까지 더한 금액으로 새벽시장에서 내놓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면 새벽시장을 찾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져 구매력이 향상되고 가격은 상향될 것임. 좋은 이미지와 더불어 소득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 생산자가 욕심을 버리고 의식을 개선해야 새벽시장이 다시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임.<강원 원주, 황윤숙>

○ 중간단계 유통마진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 농산물 유통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마진이 붙기 마련임. 한우만 예를 들더라도 중간상인이 한우를 도살장으로 넘겨 그 한우고기를 냉동차가 경매 받아 식육식당에 납품하는 여러 과정이 있음. 전화 한 통으로 한우를 가지고 오라하면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저울 달고 고기값을 받고 오면 좋으련만, 생산자가 가지고 가면 무조건 싼 단가에 매입하려는 경향이 있음. 소비자가 중간 도매상을 거친 한우고기를 비싼 값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1, 2단계 유통마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규제해야 생산자·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임.<전남 화순, 나종주>

○ 생산자가 가격결정권을 가져야 유통단계 축소, 품질경쟁이 가능해

- 시·군 기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별 작목반을 광역단위로 조직화하고 그 조직에서 판매 및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광역 단위끼리의 경쟁으로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은 물론 유통단계 축소 조성이 가능할 것임.<충북 증평, 김주식>

- 우리 지역은 농협과 협력하여 금요장터에서 감자를 팔아봤는데, 그날 서울 가락동시장 가격도 되지 않는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시장가격이 내려가 농가도, 농협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음.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판매에 열의를 보이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공산품 판매를 하기위한 미끼상품으로 손님 끌기식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니 미끼상품의 가격이 시중가격으로 굳어버려 농산물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강원 홍천, 변해동>

○ 농업특성상 농산물 유통에는 한계가 많아

- 택배산업의 발전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젊은 귀농인 중심으로는 꾸러미, 가족회원제를 도입해 직접 지은 농산물을 일년 내내 공급하는 농민들도 많아졌음. 꾸러미유통을 통해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좋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음. 한사람이 다품목을 생산할 수 없으니 여러 회원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하며 소규모 농업인들은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농업인들은 공영시장 출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많아지고 있지만 연세 많은 농민들은 사실상 어려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통단계 축소와 중간마진을 줄인 직거래 형태지만 힘들게 농사지어가면서 직접 직거래를 한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님.<충북 괴산, 박종임>

○ 농산물 유통에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 전통 장류를 생산하기 위해 농협과 '로컬푸드 협약'을 체결해 관내 콩 재배 작목반에서 청정하게 재배한 콩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음. 재배 농가는 판로걱정 없이 마음 놓고 좋은 콩을 생산하는데만 집중하고 농원은 좋은 콩으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게 되니 유통 단계 없이 상생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음.<경기 안성, 임충빈>
- 농업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농사도 힘들지만, 애써 특작을 수확해 서울 경매시장으로 보내도 홍수 출하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 1박스에 특2,000원~2,500원에 경매되고 있음.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지역 농협과 행정청에서 물량을 조절해 농민은 손해를 덜 보고 가격형성이 잘 이뤄지길 바랍.<강원 춘천, 변옥철>

○ 생산자와 농협의 공동부담으로 유통효율성 제고

- 농산물 유통은 첫째, 5일장을 이용해 소규모 판매하거나 둘째, 농협의 유통망을 통해 공동판매, 셋째, 중간도매상에 일명 발매기로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음.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되 작목별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 집하장을 설치해 선별작업, 포장 등을 하고 인건비, 박스비, 물류비 등을 출하농민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임.<충남 부여, 최영호>

○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 이익 증대

- 최근 협동조합 설립요건의 완화로 우리 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준비해 생산자 생협이 설립되었음. 과일 생산자도 채소를 사먹어야 하듯이, 농업인 모두가 자기 먹거리를 다 생산할 수 없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생협을 통해 생산자들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됨. 점차 생산자 생협이 연계되어 확장된다면 유통개선에도 파급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됨.<전남 나주, 노웅곤>

○ 유통개선을 위한 과잉투자는 오히려 비효율적

- 자본가들이 중간유통업에 뛰어들어 자본과 정보를 이용, 대량집하와 출하조절 등으로 농산물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문제가 있음. 이는 정부가 유통구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가시적·외형적인 '직거래센터' 같은 대안의 효과는 적을 것임. 지방마다 유통센터라는 큰 건물을 많이 지었으나 실효성이 적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잉투자라고 생각함. 지방마다 적절한 집하장과 도매 기능을 갖춘 전통시장, 기존의 농협이 보유한 창고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경기 안성, 임충빈>

○ 지역별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유통 효율화 실현

- 농산물이 대도시(서울)에 집하되었다가 다시 중소도시(경기, 인천, 충청 등)로 내려가는 것은 집적이익과 분산효과를 고려해도 집하와 보관시간 소요, 장거리 수송·운반으로 위생·영양상으로도 좋지 않고 품질이 저하되는 후진적 유통형태라고 생각됨. 로컬푸드 정신에 맞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큰 에너지 손실일 것임. 지역별 거점을 형성해 도매시장을 확대

하고 작목이나 재배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함.<경기 안성, 임충빈>

○ 제주 감귤의 유통구조

- 제주에서 감귤은 생산계획을 세워 품질관리, 규정화된 출하를 하고 있음. 현재 농협 작목반 총 20여 개소에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통경로가 너무 많다보니 부작용이 많음. 공판장, 직거래 체제로 적절한 단일화가 절실한 상태임.<제주 제주, 정은실>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고정직불금 형평성 검토

-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고정직불금 단가 차가 종전에는 14만9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커지는데 논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개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직불금 단가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사실상 비진흥지역 농지가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데 단가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종전 수준대로 금액차이를 유지시켜 고정직불금 상향조정에 따른 손해가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길 바람.<전남 순천, 김중근>

○ 직접직불제도의 기준 검토 및 지원 실태조사 요구

- 직접직불제도는 농가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2001년 도입 당시 대상 농지를 1998~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해 선정한 이후 새로운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그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 세월이 많이 흘러 농지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기준시점은 그대로인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를 재조사해 선정함이 마땅함.<전남 나주, 노웅곤>
- 예전부터 밭으로 써온 농지도 산 번지라하여 밭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산 번지는 행정적으로 구분된 것이지, 소유주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닌데 불합리하다고 봄. 11월 초 농산물을 다 거둬들이고 로터리 쳐놓은 상태에서 요원이 와서 조사해 가서 8만 원 가량의 직불금만이 입금되어 황당함을 겪었음. 농관원측에서는 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와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하면서 눈짐작으로 평가해 직불금 기준을 매기는 것은 농민을 더욱 우롱하는 처사임.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불제를 시행해주길 바람.<경기 안성, 이길숙>

- 정부에서 밭직불제를 시행하는데 직불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을에서 이장이 관리하며, 마을공동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 함. 농특세며 토지세를 토지주가 내고 주민 모두가 밭직불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밭 직불금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함.<경기 가평, 이재순>

○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해 생산직불제 정책 요구

- 해마다 같은 면적·같은 시기에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가격은 항상 들쭉날쭉하고 있음. 같은 면적이니 같은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비닐, 농약 등 자재 값, 모종구입비,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시장에 내보내는 생산물의 가격은 갈수록 떨어져 전년대비 15%정도 하락하였음. 소득 보전을 위해 20% 오르는 값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답답한 심정이 듬.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생산비 지원이 절실함. 생산직불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경기 안성, 이길숙>

○ 농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부가세 면제나 환급이 가능하게 해야

- 농업의 경쟁력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거나 보강하기에는 적잖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때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큰 힘이 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농민 대부분은 사업자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라서 환급이 어려운 실정임. 사업비가 100일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순사업비는 91, 9는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세금이며 50% 보조금 지원사업일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4.5%는 환급을 금지하고 있음. 농민들을 위한 보조 사업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를 사업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부가세는 농가에서 납부 후 환급받도록 조치해야 함. 부가세 환급 농가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사업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임.<경기 용인, 김정태>

○ 농업인 화물차 구입 시 세금면제 혜택 요망

- 옛날처럼 우마차나 경운기를 사용하던 시기와 달리 화물차 덕분에 장거리까지 이동성이 좋아지고, 물품 운반이 편리해졌음. 그런데 화물차 가격이 1,500~2,300만 원 정도로 비싸서 농업인으로서 구입하기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농업 종사자가 화물차 구입 시 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필요함.<충북 옥천, 정일영>

○ 농업현실을 고려해 농업인 대출금리 하향 조절해야

-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율은 여전히 3%임. 각종 농업지원사업에서 대출금리는 현실에 맞게 낮게 조정하고, 후계 농업경영인의 대출금리도 1%대로 더욱 낮춰야만 앞선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경기 용인, 김경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5월 6일~10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자 작년보다 75% ↑

- 한국농어촌공사, 올해 **2030 젊은 세대의 농지 지원사업*** 신청자 ('12년) 1,144명 → ('13년) 2,008명으로 **작년대비 75% 상승**해 **2030 젊은 세대의 농업정착 및 창업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지 지원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 이처럼 신청자가 늘자 당초 농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1,056농가 외에 890명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2,400ha 농지 지원**. 특히 젊은 귀농인 등의 초기 농업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10년간 장기 임대차 방식·장기저리(30년, 2%) 용자방식으로 농지매입자금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이미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606명(68%), 귀농·귀촌을 통한 신규 전입자는 284명(32%)

※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청년 취업난 등에 대처하기 위해 '12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최대 5ha까지 농지를 장기임대 또는 장기저리용자 방식으로 지원

자료 : 농민신문(2013.5.8) / 농수축산신문(2013.5.9)

□ 농식품 기술수준, 선진국 75% 불과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국내 농식품 기술수준 진단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요인을 분석코자 시행한 '2012년 농림수산물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2012년 국내 농식품기술수준**...3년 전에 비해 8%p 성장한 **75.4%**로, **기술격차는 0.9년 줄어든 5.2년**으로 조사. **▲한국의 농식품 R&D 투자**...**미국의 약 10%에 불과**, '11년 기준 한국 정부의 R&D 투자는 1조597억 원으로 미국 정부의 6조2,324억 원 대비 17%, **민간 R&D 투자의 경우** 미국은 9조5,126억 원, **한국은 미국의 5% 수준**인 4,655억 원으로 민간의 경우 **더욱 심각**. 향후 선진국의 기술 수준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필요
- ※ 이번 기술수준 평가는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상의 20개 부문별로 최고 선진국을 100%로 놓고 보았을 때 국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5.7) / 농민신문(2013.5.8)

□ 안 · 터키 FTA 5월1일자 발효

- 우리나라의 **9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터키 FTA 발효(5.1일자)**. 이날부터 **터키산 진포도·토마토케첩·올리브유·밀(사료용)** 등 **194개 (HS 10단위 기준) 농수산물 관세 철폐**. 터키의 주력 수출품인 **앞담배** 관세는 2023년, 이밖에 **레몬·무화과·헤이즐너트** 등 과일류는 5~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터키는 다양한 기후대에서 생산하는 **신선채소·과일**을 **유럽에 대량 수출**. 우리나라는 **‘11년 기준 5,470만 달러 터키산 농수산물 수입, 수출은 1540만 달러**. 수입 농수산물 가운데 앞담배가 800만 달러로 1위
자료 : 농민신문(2013.5.6)

□ 주경안 국외 통과...농식품분야 1,142억 원 확정

- 농식품부, 5.7일,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17조3,000억 원)** **국회 통과.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 정부가 편성한 973억 원(기금사업 지출 확대 3,010억 원 제외) → **1,142억 원(169억 원↑) 확정**, 국회 심사에서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35억 원),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7억 원) 등 42억 원 감액, ▲수리시설개보수(200억 원), 농업관측(11억 원) 등 211억 원 증액.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통과

- **도농교류법 개정안**...매년 7.7일 ‘도농교류의 날’ 지정, 도시민과 농어촌체험마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과 병행 추진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박근혜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 법안, 농기계 임대 사업자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를 시장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 임대사업자의 범위 지자체·농협 → 일반기업으로 확대, 정부 지자체 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경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사업화·제품화 촉진 도모하는 내용 추가
※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자료 : 농민신문(2013.5.8)

□ 내년 조사료 자급률 90% 목표로 생산·유통 지원에 집중

- 농식품부, 5.3일 **‘조사료 증산 추진 및 보완대책’** 마련. **내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ha로 확대**함으로써 **조사료 자급률 90% 목표**로 생산 장려금 지원·생산연합체 운영 등 조사료 **생산·유통부문 지원에 집중**. 지난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33만ha로 늘린다는 목표였으나 26만8,000ha에 그쳤으며, 자급률도 80%로 하락. 이에 경종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생산장려금 지원, 사일리지제조비의 국비보조 비중 확대, ‘동계 논 사료작물 생산연합체’ 구성해 이들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지원, 유향 산지를 활용한 임간초지 조성 및 간척지와 하천부지에 사료작물 확대,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이용 유도, 조사료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키 위해 국비 보조율 조정, 조사료 세부내역 사업도 통폐합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특히 내년까지 도 농업기술원 등에 분석장비 지원 등을 통한 품질평가시스템 구축·운영, ‘15년부터는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현행) ‘무게’ → (개편) ‘무게 및 품질’로 변경, 품질에 따라 차등지급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5.6)

□ 가축분뇨 자원화로 창조산업 육성

- 농식품부, 5.1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발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선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시설 확충, 후 가동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집중.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17년까지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목표 달성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퇴·액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은 ‘16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17년부터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액비를 생산하는 개별농가도 ‘17년부터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 농경지 등에 사용 ▲**민간전문관리기구 설립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 올 상반기 운영 및 ‘15년 정식 출범 ▲**제도개선, R&D 확대 및 평가·포상** 등 4개 과제에다 세부 16개 과제로 마련
자료 : 농민신문(2013.5.6) / 축산신문(2013.5.6)

□ 산림청, ‘손톱 밑 가시’ 뽑는다

- 산림청,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 규제 우선 완화**. 이에 따라 **일자리 참여 연령제한 완화, 임업분야 경영환경 개선 등의 규제 완화와 목재제품 품질기준 마련 등 규제강화 병행** 개선. ▲**주요내용**…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올해부터 폐지,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 50세 미만 → 55세 미만으로 완화, 산림치유 지도사 활동영역을 치유의 숲으로만 한정 →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확대. 이런 조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위한 조치. 또한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 조성 위해 목재 펠릿과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저급한 목재 제품 유통 사전 차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산지 전용 허가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입목축적·평균경사도·비탈면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5.6)

□ ‘무늬만 로컬푸드 직매장’ 난립 우려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화두가 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표방한 판매장이 곳곳에 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우려** 제기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운영 난무]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설립·운영
 - 지난해 4월 전북 완주 용진농협에 이어 올 4월에는 경기 김포농협이 농협으로서는 두번째. 농협중앙회,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20곳, ‘16년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
- **일부 중소 유통업체들이 개설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향후 2~3년 내에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 명확한 법적 정의 없어 개설·판매 쉽고, 해당지역 농산물 여부 등 확인할 길 전문한 실정
- 이런 상황에서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자칫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팔거나, 생산자 실명이 사실과 다른 일이 발생할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
 - ※ 최근 전북 일대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 표장을 도용해 마치 공인된 로컬푸드 직매장인양 홍보하는 업체도 등장

[로컬푸드 직매장의 안착을 위한 과제 산재]

- 제대로 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포장, 진열, 가격 결정, 재고 회수**하는 등의 네 가지 원칙 준수
 -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식품안전 사고나 원산지 표기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커 **소비자 신뢰도 저하**될 가능성 존재
- 로컬푸드 직매장이 **영세소농의 판로 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들도** 본인이 생산한 것을 **책임 있는 자세로 직매장에 공급**
 - ※ 일본의 농산물 직매장의 경우 ‘얼굴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농가들의 책임 의무 강조
- 농식품부…내년 초 제정 예정인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법을 통해 직거래 장터에 대한 **정부 인증시스템 마련**할 계획, **로컬푸드 직매장도 검토**

자료 : 농민신문(2013.5.6)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4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201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4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4.9억\$ 달성 - 전년 동월대비 5.0% 증가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종합

○ [13.4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49억 불, 전년 동월대비 5.0% ↑

- 부류별로는 **신선농식품 98.8백만 불, 가공식품 390.7백만 불**, 각각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6% ↑, 2.3% ↑**

<2013년 4월 부류별 농림축산식품수출 실적>

단위: 백만 불, %

구 분	당월실적(4월)			누계실적(1~4월)		
	'12년	'13년	증감률	'12년	'13년	증감률
신 선	84.0	98.8	17.6	337.9	346.2	2.5
가 공	382.0	390.7	2.3	1,430.8	1,457.7	1.9
합 계	466.0	489.5	5.0	1,768.7	1,803.9	2.0

○ [4월 농식품 수출 증가 원인]

- 엔저로 인한 일본으로 수출이 감소한 반면,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으로 수출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
- 인삼(17.4%), 파프리카(10.5%), 라면(17.8%), 음료(25.2%), 비스킷(28.6%) 등이 수출증가세 주도

□ 부류별

- **[신선농산물]** 인삼(17.4%)·파프리카(10.5%)·딸기(12.6%)·새송이버섯(10.4%) 등은 증가한 반면, 김치(△6.1%)·국화(△38.4%)·닭고기(△29.1%) 등은 부진
- **(인삼)** 대수출국인 중국·일본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연말 연초 TV홍보 등의 마케팅 노력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
- **(파프리카)**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서의 호황과 작황 호조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로 인한 수출 증가
- **(새송이)** 네덜란드 주 수출업체의 일부 물량 품질 저하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지만, 캐나다·미국 등에서 마케팅 노력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달성

- **(국화)** 엔저 및 동절기 난방비 상승에 따른 휴경으로 수출물량 미확보에 따른 수출 감소

- **(닭고기)**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실적 하락

- **[가공식품]** 커피조제품(19.8%)·라면(17.8%)·비스킷(28.6%) 등은 증가한 반면, 막걸리(△74.4%), 조제분유(△47.4%), 마요네즈(△11.7%) 등은 감소

- **(커피조제품)** 중국에서 커피믹스 수요증가, 러시아에서 커피크리머 가격경쟁력 회복, 일본 시장에서 캔커피·커피믹스 수출물량이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 지속

- **(라면)** 엔화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일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미국·중국·홍콩 등에서는 한류 영향으로 라면에 대한 수요증가로 수출액 증가

- **(비스킷·음료)** 중국·미국을 비롯한 홍콩에서 수출증가세 주도, 특히 비스킷은 중국에서 고급화 전략으로 물량은 소폭,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

- **(조제분유)** 중국, 베트남 등으로 3월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출 물량 재고 소진을 위해 4월 당월은 일시적으로 수출량 감소

□ 국가별

- **[13.4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 홍콩(69.1%)·ASEAN(21.8%)·중국(15.5%)·미국(19.9%)·EU(12.7)는 증가한 반면, 일본(△10.5%)·러시아(△9.8%)·대만(△1.7%)은 감소

- **(일본)** 엔저 현상과 한류 열기 둔화로 수출 난항

※ 제3맥주(12.8백만 불, △6.7%), 김치(6.0, △13.9), 소주(7.2, △11.9), 혼합조제 식료품(10.7 3.4), 파프리카(9.8, 10.6)

- **(홍콩)** 마케팅 노력과 옥외·TV광고 등의 홍보 노력으로 수출 급증

※ 껌(5.7백만 불, 1,020%), 홍삼(5.0, 760.3), 맥주(2.8, 69.4), 딸기(1.4, 25.8),

- **(미국)** FTA 관세혜택 품목인 커피조제품, 음료, 라면 등의 수출이 증가,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상품개발에 힘쓰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증가율 유지

※ 음료(5.5백만 불 2.2%), 껌(4.6, 64.3), 라면(2.4, 9.3), 홍삼정(1.0, 899.5), 고추장(0.8, 18.5)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